

독일 통일과정에서 문화유산 조사와 보존관리

- 고고학 조사와 유적 보존을 중심으로 -

김종일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Corresponding Author : jikim218@snu.ac.kr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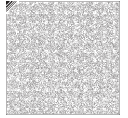
20세기 초반까지 독일 고고학에서는 유물·유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섬세한 관찰을 중시하는 연구 경향과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 혹은 자민족 우월주의의 입장에서 물질문화의 연구를 통해 과거의 민족 혹은 종족의 자취를 찾아 그들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려는 시도가 공존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동서로 분열된 이후 구 서독에서는 전통적인 독일 고고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유물·유적의 관찰과 목록화, 그리고 편년과 분포의 확인에 집중하였다. 구 동독에서는 맑스주의의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을 물질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는 시도와 함께 과거의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사회주의의 이념에 충실하거나 혹은 그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서독과 구 동독의 고고학은 분열 이전의 독일 고고학의 전통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었다. 분열 이후에도 고고학자들의 교류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었고 구 동독의 고고학이 구 서독의 고고학, 그리고 유럽 고고학 전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름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동·서독 고고학의 통합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이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비교적 단시일 내에 통합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 보존의 측면에서는 공통의 연구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공동 조사와 학술 교류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비록 맑시즘과 주체사상에 의거한 형식화된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받아들여서는 열린 마음을 통해 남북한 고고학 및 문화유산 보존의 간극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나름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독일 통일, 독일 고고학, 문화유산, 보존 관리, 상호 교류

투고일자 2018. 12. 31 ● **심사일자** 2019. 01. 16 ● **게재확정일자** 2019. 02. 01



I. 머리말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 동독과 구 서독이 통일된 이후 선사 및 역사시대의 물질문화를 포함하여 과거 시기의 유산의 조사와 보존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고고학 분야에서도 연구기관과 제도, 인력, 그리고 연구 주제와 방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의 노력이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독일 고고학에서 진행되었던 통합의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되새겨 보는 작업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 고고학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여러 문제들과 과제들을 미리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주도로 북한 유물의 전시 및 유적 조사(예를 들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등)를 지속해왔다. 한국고고학회에서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고학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한 여러 기초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과 관의 고고학 관련 연구 및 조사, 그리고 협력 프로젝트는 향후 남북한 협력과 이를 토대로 한 통일로 가는 긴 여정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체계적인 유적 조사와 고고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시도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주요 연구 주제와 연구 시각을 지배해왔던 특정 이데올로기, 즉 맑시즘과 주체사상의 역할과 구 소련의 영향을 받은 연구 체계(대학과 박물관, 사회과학원 등), 그리고 학문 자체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와 지배 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비로소 공동 조사 및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고고학 연구의(일종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 실제로 북한의 고고학 연구나 유적

조사 및 보존 체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즉 과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보존의 문제에서 남한과 북한의 입장과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궁극적 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로드맵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고고학 관련 기관의 통합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련 기관들의 통합은 단지 제도적 통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구 서독과 구 동독이 서로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정치적 존재로 규정하는 헌법상의 차이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접근과 중앙집중식 통제라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행정 및 관리 체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제도의) 통합의 방향과 과정을 결정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고고학 관련 기관의 통합 방향과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법과 제도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고고학 내부의 문제로서 독일 고고학의 역사적 연원과 특징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1) 동·서독 통일과 관련한 헌법상의 문제, 2) 근대적 의미의 독일 고고학의 형성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고고학 연구의 경향과 그 유산에 대한 계보학적 검토, 3)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까지 이러한 나치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동·서독 고고학계의 노력, 4) 1990년 이후 독일 고고학계의 통합 과정과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3)과 4)의 주제와 관련하여 과거 청산, 고고학 관련 기관 및 연구 인력의 통합과 재분배, 그리고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 등 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동·서독 통합과 고고학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독일 고고학 연구 및 문화유산 조사기관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기관 및 정책의 변화가 국가의 이념적 지향과 이에 수반된 각종 제도 및 기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헌법 및 제도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지의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¹

우선 독일의 정식 명칭이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또는 Bundesrepublik Deutschland)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정식 명칭이 미합중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인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여러 개의 주(State 또는 Länder)와 독립 도시-주(city-state)에 토대를 둔 연방공화국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49년 구 서독에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통일 독일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Grundgesetz)의 머리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Rhein)강변 본(Bonn)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週) 사이에, 관여한 독일의 주(州)들 중 3분의 2 이상의 곳에서 국민 대표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근거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는 그 의장이 대표하여 기본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제14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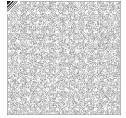
제3항에 따라 연방법률공보에 기본법을 반포한다. (Deutscher Bundestag 1949 [2017],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역, 2016,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머리말, 국가별 법령집)

이 기본법의 머리말에서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통일 독일의 기본법은 1949년의 구 서독 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둘째, 이 기본법이 독일의 각 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동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법 서문 다음에 등장하는 다음의 기본법 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과 인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통합된 유럽 내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가운데, 독일 국민은 자신의 헌법 제정 권력을 근거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쉘레스비히-홀스타인과 튀링겐 지방(支那)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Deutscher Bundestag 1949 [2017],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reamble: 1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역, 2016,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전문, 국가별 법령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전문에서는 단순히 독일 국민이 아니라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와 각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유로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독의

1 법적 측면에서 살펴본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에 대한 필자 자신의 검토와 함께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민족통일연구원, 1999, 『법적 관점에서 독일 통합』, 민족통일연구원. 김현식, 2006,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논의」 『서강법학』 8,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전광현, 1992, 「독일 통일 관련 조약과 독일 헌법의 발전」 『한림법학Forum』 1,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기본법에 토대를 둔 독일 연방의 기본법이 전 독일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 동독의 경우에도 1949년에 제정된 최초의 기본법의 조항 1에서는 구 서독의 기본법과 유사하게 각 주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의 경우 주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실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Constitution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ct. 7, 1949, Article 1,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반면에 1968년에 새로 개정된 기본법 전문에서는 독일, 즉 구 동독이 독일(민족)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노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치체임을 천명하여 각 주의 자치권 대신 노동계급과 당, 그리고 사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Constitution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pr. 6, 1968, Article 1,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연구기관과 문화유산의 보존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주(State 또는 Länder)가 신성 로마제국 이래 독일 역사에서 매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 동독에서 기존의 주를 해체하고 광역구역(Bezirk)으로 불리는 행정단위를 신설하여 중앙집중식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적어도 고고학 연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서는 구 서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동독에서조차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존의 주가 실제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독일의 기본법 서문과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통일이 서독과 동독의 국가 통합에 기반을 둔 양 국가 간의 통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구 동독을 구성하고 있던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의 주민들이 구 서독, 즉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 혹은 편입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본법 전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구 서독에서 1949

년에 제정된 기본법은 독일 연방의 기본법으로서 당시 구 서독에 속한 주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결정에 의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참여와 결정에 동참할 수 없었던 독일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 동독의 주들과 주민들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 주와 주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독일 연방에 참여하여 이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모든 독일인이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의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구 동독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8년에 제정된 기본법에서 자신들이 독립된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 서독에서는 1949년 이래 지속적으로 구 동독이 구 동독에 포함된 각 주와 그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수립되지 않았고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강제적으로 세워진 일종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 동독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구 동독에 속한 각 주와 그 주민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독일 연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본법에 명시하였고 실제로 독일의 통일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1990년 구 서독과 구 동독 사이에 맺어진 통일 조약(Unification Treaty)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조약에서는 구 동독의 행정단위인 광역구역을 폐지하고 구 동독에 속했던 원래의 5개 주를 복원하며 이 5개의 주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이자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Unification Treaty, Aug. 31, 1990, Article 1,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또한 13조에서는 구 동독의 행정 및 사법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련 기관들 또한 구 서독의 경우에서 처럼 그 기관이 속한 주의 주 정부 관할 하에 두도록 하였고, 어느 대규모 기관의 산하 기구들도 그 기구들이 속한 주의 관할 하에 속하도록 하였다(Unification Treaty, Aug. 31, 1990, Article 13,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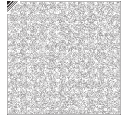
and Images). 통일 이전에 구 동독에서 독일 연방정부 (구 서독과 통일 독일)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관의 경우 그 기관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최상위의 독일 연방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각 주와 최상위 기관은 자신들에게 속하게 된 구 동독의 해당 기관을 전환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즉 구 동독에서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한 거의 대부분 기관들의 생사여탈권을 통일 독일 각 주의 주 정부와 독일 연방 내 동종의 최상위 기관(실제적으로는 구 서독)이 쥐게 되었다. 구 동독 내의 박물관과 후술할 사회과학원, 그리고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고고학 및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은 철저히 구 서독의 관련 기관과 주 정부의 의지에 의해 구 서독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개편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Ⅲ. 독일 고고학의 등장과 나치즘

서구의 각 나라별 고고학사를 정리하는 작업에서 아마도 독일의 경우처럼 자체 고고학 연구사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 고고학이 성립한 이후 고고학 연구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등장했던 여러 문제들이 1930년대 이후 1990년까지 대략 60년 동안 독일 고고학에서 모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민족의 기원과 과도한 민족주의,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인종주의,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와 특정 이데올로기(특히 맑시즘)에 의해 통제되는 과거의 해석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독일 고고학계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까지 독일 고고학의 연구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평가하기 위한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의 제3제국, 즉 맑시즘의 입장에서 나치즘과 독일 고고학의 관계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를 폐기한 구 동독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이 독일 고고학과 나치즘의 관계와 그 유산을 비판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

도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의 소위 주류고고학에서도 독일 고고학사를 정리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들 역시 독일 고고학의 일부 모습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한계를 떨 수밖에는 없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실상 당시 독일 고고학의 주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에 기반한 편년과 고고학 문화의 설정 작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Härke 2000; Murray and Evans 2008; Veit 2000). 후자의 경우 앞서 제기한 독일 고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가급적 고고학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소략하게 소개하고 있다(Kossack 1999; Sommer 2000).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독일 고고학사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구 서독과 구 동독의 고고학 연구, 그리고 통일 이후의 독일 고고학 연구의 방향 및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대 학문으로서 고고학이 등장한 19세기 초반 이후 고고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의 시간적 순서와 공간적 분포의 경계를 설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문화 혹은 문화권의 시공간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김종일 2017: 257~259; Gräslund 1987: 17~29). 예를 들어 덴마크의 톰센이나 보르소는 형식 분류와 순서 배열 등을 사용하여 유물의 시간적 상대 서열을 설정하는 동시에 북부 유럽 중심의 편년 체계를 수립하였다(Thomsen 1848). 스웨덴의 몬텔리우스는 유럽 각지에서 출토된 유사한 형태의 청동 유물을 비교하여 유럽 청동기시대의 지역별 편년 체계(Montelius 1903, 1986)를 수립하고자 하였다(김종일 2017: 257~258; Gräslund 1987: 17~29; Trigger 1989: 80~89). 다뉴브강 혹은 중부 유럽 자료를 중심으로 한 유럽 선사시대의 종합적인 편년 체계는 영국의 차일드를 거쳐 독일의 라이네케에 의해 완성되었고, 이후 코작 등의 수정 보완을 거쳐 현재 안정적인 편년 체계로 인정받게



되었다(Kossack 1957, 1959, 1981, 1995; Reinecke 1911, 1965, 1924; Torbrügge 1989, 1992; Trachsel 2004). 이 작업은 오랜 동안 독일을 포함한 중부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유럽 전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선사시대 유적·유물의 수집과 발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이미 15세기 중반 콘라드 포이팅거(Conrad Peutinger 1465~1547)와 베아투스 레나누스(Beatus Rhenanus 1485~1547)가 독일 내 로마 유적과 게르만에 관한 저술을 남긴 바가 있으며, 이 시기에 일종의 발굴 조사가 최초로 시작되었고 뷔르템베르크 공작 루트비히에 의해 최초의 유물 전시관이 슈투트가르트에 세워졌다(Kossack 1999: 9~11). 니콜라우스 마샬크(Nikolaus Marschalk 1460~1527)는 한 귀족 가문의 계보를 선사시대로부터 찾으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거석 무덤(신석기 중기에 해당)을 게르만 일족, 봉토 무덤(청동기 중기에 해당)을 슬라브족, 그리고 화장묘(청동기 후기의 무덤)를 슬라브족 노예의 무덤으로 비정한 바 있다. 이후 17세기에 들어와 안드레아스 알버트 로즈(1682~1724) 등을 포함하는 호고주의자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각지에서 골동품들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며 이를 통해 '먼 과거'의 흔적들을 추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다(Kossack 1999: 9~15).

이 시기의 독일 내의 호고주의적 전통, 그리고 이후 독일 고고학의 기본적 연구 패러다임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은 헤르더(J. G. Herder 1744~1803)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의 자취를 관습이나 습관, 언어 등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자연과학처럼 치밀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강조하는 고고학과 정신적 성취나 특징을 강조하는 고고학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독일 고고학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Kossack 1999: 16).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나폴레옹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각지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의식이 점차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물질 자료를 근거로 '민족'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특히 각지에서 아마추어 호고주의자들은 각 주의 군주들의 후원 하에 고고학 및 고대사 연구모임을 만들고 지역 및 국립 박물관에 활동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852년에는 이러한 모임의 전국 연합체(Gesamtverein der Deutschen Geschichts- und Alterthumsvereine)를 결성할 정도가 되었다(Daniel 1977; Jones 1997; Trigger 1989; Kossack 1999; Veit 2000). 19세기 초반부터 독일 각지에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와 함께 유물 목록화 작업 및 초보적인 형태의 편년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1822년에는 실레시아의 브레스라우대학에 '역사학을 보조하는 학문들과 고유물(Historical auxiliary sciences and antiquities)'을 위한 교수 직위가 마련되었는데 독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선사고고학 교수직이기도 하다.² 이후에도 물질 자료를 통해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을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물질문화를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의 기원 및 관습과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역사학자들과 고전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선사고고학자들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 초기에 게르만, 켈트, 그리고 슬라브족이 어떻게 등장하여 민족으로 성장하고 이후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해명해주길 원하였다. 그러나 이에 적합한 방법론은 물론이고 정확한 유물의 편년과 분포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과정을 해명하는 것이 매우 요원하였다. 한편 선사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비판적 태도에 대해 당시의 고고학 연구가 각 지역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2 브레스라우가 속한 실레시아 지역이 프로이센에 포함된 역사가 짧고 현재는 폴란드 영토라는 점에서, 그리고 교수직의 명칭이 반드시 선사고고학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도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대학에 설치된 최초의 선사고고학 교수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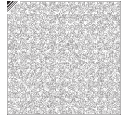
대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마인츠에 게르만-로마 중앙박물관을 세우게 된다. 독일과 독일어 문화권에서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고전고고학이 일반적인 고전학과 문헌학에서 점차 독립되어 예술사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Kossack 1999: 23~42).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네안더 계곡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인골이 발견되고 스위스의 라텐네 호수에서 주거지(철기시대)가, 그리고 할슈타트 광산에서 대규모의 무덤(청동기 후기 및 초기 철기시대)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들을 통해 이전까지는 쉽지 않았던 유물에 대한 본격적인 편년 작업과 함께 이 유적을 남긴 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민족지 자료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 1821~1902)였다. 당시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저명한 병리학부학 교수였던 그는 선사시대 주거지와 성채 유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제 발굴조사와 함께 학술지 발간과 베를린 및 독일 인류학회(Berliner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와 Deutsche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의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하인리히 슐리만과 프란츠 보아스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그는 역사시대 이전에 부족 혹은 종족들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변화해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문자 기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선사고고학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편년과 분포의 확인을 객관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통해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Kossack 1999: 25). 실제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티슐러(O. Tischler 1843~1891)와 라이네케(Paul Reinecke 1872~1948)는 피르호가 강조했던 유물·유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섬세한 관찰을 통해 치밀한 편년 수립 작업에 집중하여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유럽 선사시대 편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긴 바 있다. 물론 이들의 연구 성과는 물론 연구 방법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고고학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한편 헤르더와 피르호 이후 독일 고고학은 라첼을 비롯한 문화지리학과 문화권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은 문헌학과 언어학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최초의 베를린대학 선사고고학 교수가 된 구스타프 코지나(Gustaf Kossinna 1858~1931)였다(Arnold 1990: 464~466; Gebühr 1987: 110~115; Hassmann 2000: 67~71; Veit 2000: 41~54). 그는 고고학은 애국적 학문이며, 따라서 고대 게르만족의 기원을 찾는 것이 고고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게르만족(그리고 아리안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는데, 물질문화에서 유사성 내지 상사성이 민족성(종족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거지 유적이라고 생각하였다(Kossinna 1920: 1~4).

이러한 코지나의 생각은 종래의 선사고고학자들이 편년 체계의 수립에서 가장 필요한 유물의 공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무덤 자료에 주목하고 이러한 무덤 자료에서 출토된 개별 유물들의 공반 관계를 중심으로 편년 체계를 수립해 나아간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었다. 영미 고고학에서 주거지에 본격적으로 주목했던 시기가 고든 차일드가 소련을 방문한 이후인 1930년대이며 미국에서 신고고학이 태동하였던 1950년대였음을 감안하면(Childe 1954; Chang 1968), 코지나의 이러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선진적이었다(Gebühr 1987; Gramsch and Sommer 2011; Murray and Evans 2008; Smolla 1979, 1980). 또한 이전부터 독일 고고학자들이 고민해왔던 문제들, 즉 고고학적 물질문화(특히 주거지 자료)와 민족(혹은 종족)을 관련지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치밀한 편년 체계의 부재와 함께 고고학자들이 해결하고 있지 못하던 문제, 즉 양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방법론은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 자신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는 유럽에서 다



양한 선사시대 유물의 조합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집단의 대체,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문화의 모자이크로 파악되며 결국 문화권은 민족(혹은 종족)의 영역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김종일 2017: 260). 이러한 코지나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가 나치즘의 인종 차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그가 나치 정권에 직접 협력하거나 나치즘의 이론적 토대를 직접적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오·남용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고고학 학문 자체에 대한 관점과 태도, 그리고 독일 민족, 즉 아리안족의 우월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리안족의 기원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고 시도했던 그의 연구 방식은 나치에 의해 독일 인종의 우월성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코지나의 연구는 그의 뒤를 이어 베를린대학 고고학 정교수가 된 한스 라이너트(Hans Reinerth 1900~1990)에 의해 계승된다. 그는 나치 정치 지도자들과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베를린대학 정교수가 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훈련을 받은 고고학자로서 그가 거처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그의 발굴조사 방식은 유사 혹은 아마추어 고고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김종일 2017: 267; Arnold 1990: 467~469; Arnold and Hassmann 1995: 73~78; Kossack 1999: 62~64; Eichkhoff 2005: 75~76; Hassmann 2000: 76~78; Wiwjorra 1996: 173~177). 한편 1930년대를 거쳐 등장한 히틀러와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치하의 독일 선사 및 원사고고학 연구는 크게 당 산하의 로젠하임 연구소와 나치 친위대(SS) 산하 아넨에르베(Ahnenerbe)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연구기관들은 코지나에 의해,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라이너트에 강조되었던 독일의 민족 기원, 특히 아리안족의 기원을 네덜란드와 덴마크, 그리고 북부 독일 지역의 거석 무덤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다(김종일 2017: 267~268; Arnold 1990: 469; Hassmann 2000: 81~86).

로젠하임 연구소에서는 라이너트와 같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고고학자들이 일부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넨에르베에서는 나치 친위대를 책임지고 있던 히믈러의 지휘 하에 나치의 정치적 선전·선동에 필요한 근거를 어떠한 과학적 혹은 논리적 근거를 무시한 채 선사 및 원사시대의 자료, 특히 원시 신앙과 관련한 상징이나 기호 등에서 찾고자 했던 빌헬름 토이트(Wilhelm Teudt)나 헤르만 빌레(Hermann Wille)와 같은 사이비 아마추어 몽상가들을 긴밀히 후원하였다(김종일 2017: 267~268; Arnold 1990: 468~469; Arnold and Hassmann 1995: 77~80; Halle 2005). 예를 들어 이들은 북부 독일 지역에서 이전부터 알려져왔던 자연 암석 혹은 거석 무덤을 아리안족의 제의 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전문 고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믈러와 그의 지휘 하에 있던 나치 친위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와중에 각 대학 고고학과 도서관에 대한 나치의 도서 검열이 이루어졌다. 베를린대학과 거의 같은 시기에 고고학과 정교수직이 마련된 마부르크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나치에 동조하지 않거나 나치에 협력한 어용학자들의 방법론과 해석을 비판해온 고고학자들이 강단에서 축출되었으며 이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나 강단에 돌아올 수 있었다.

라이너트와 나치에 맞서 저항한 극히 소수의 연구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독일고고학연구소 소장이었던 게하르트 베르수와 함께 종전 이후 구 서독과 구 동독에서 선사 및 원사고고학 연구를 이끌어왔던 많은 고고학자들을 양성한 마부르크대학의 게로 폰 메하트(Gero von Merhart 1886~1959) 교수를 들 수 있다. 폰 메하트는 원래 피르호와 같이 자연과학(특히 지질학)에서 출발하여 선사고고학으로 전공을 바꾼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에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의 박물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교수자격논문인 「예니세이의 청동기 문화」를 작성하게

된다. 그는 이후 중근동 지역 고고학 전공자로서 앞서 언급한 라이너트와 대립하였다. 또한 코지나와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강조되어온 민족학으로서의 고고학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제시된 주장을 완전하고 이미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Kossack 1999: 65~76). 대신 인간의 정신은 실제적인 물질적 형태로 드러난다는 전제 아래 형식 분류 및 편년을 포함한 철저한 유물 중심의 고고학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종전 후 복직한 다음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가치 중립적인 고고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원래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는 사실과 함께 나치 치하의 사이비 고고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칫하면 고고학이 정치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자각, 그리고 전후 동·서독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정치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르호와 티슐러, 그리고 라이네케에 의해 유지되어왔던 유물 자체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편년에 집중하는 연구 경향이 독일 고고학의 한 흐름으로 여전히 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이후에 독일 각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자료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포와 편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이래 독일 고고학계 내에서 여전히 고고학자들의 주요 임무로 남아 있었다. 구 서독에서는 폰 메하트의 영향을 받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고고학 이론이나 해석보다는 일차적으로 유물의 관찰과 기록에 중점을 둔 고고학이 성행하게 되었다(김범철·김중일·이기성·오영찬 2014: 73; Kossack 1992: 102~104). 구 동독에서도 폰 메하트의 제자이자 구 동독 고고학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르너 코블렌츠(Werner Coblentz)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고학 자료의 수집과 이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의 전통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당의 지

도 노선과 계속 충돌하고 있었다. 결국 구 동독에서는 당의 노선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길으로는 당의 입장을 따르거나 그 입장에 크게 거슬리지 않은 선에서 실증적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스스로는 당원이 되어 당의 입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되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원로 고고학자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독이 분리된 이후 구 서독에서는 고고학 연구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어떠한 해석도 배격하는 유물 중심의 고고학(자연과학적 분석을 포함하여)이 주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이전까지의 민족이나 종족을 강조하는 고고학에 대한 소극적인 반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독일 고고학의 주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인 실증적인 연구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구 동독에서는 기존의 실증적인 연구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이론적 강령인 맑시즘의 사적 유물론을 통해 이러한 나치즘의 유산을 청산하려고 시도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 다른 모순에 빠지는 문제점을 보이게 된다.

Ⅵ. 독일의 분단과 과거 청산 - 동·서독 고고학의 형성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유적·유물에서 아리안족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당과 나치 친위대의 정치적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일부 강단고고학자들과 사이비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은 곧바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된다. 이와 아울러 상당수가 연구기관에서 배제되거나 연구 활동을 금지당하게 된다. 물론 로스톡대학과 키일대학에 재직하면서 나치 친위대 산하 아넨에르베에서 활동했던 양쿰(H. Jankuhn 1905~1990)의 예처럼 나치 패망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대학(괴팅겐대학)에 복직하여 학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치 독일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비판하고 극



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 서독에서는 소극적 차원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구 동독에서는 사적 유물론이라는 새로운 이론 체계에 근거하여 나치의 유산을 철저히 비판하는 적극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 서독의 고고학계에서 코지나의 업적과 한계에 대해 일체의 언급 자체(비판을 포함하여)를 하지 않은 것은 주목된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치 독일에 의해 직장과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고고학자들이 다시 복귀하였다. 예를 들어 구 서독에서는 마부르크대학의 메하트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독일고고학연구소(Deutschen Archäologischen Institut) 소장이었으나 라이너트와 나치에 저항하다가 직위에서 해임된 후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온 게하르트 베르수(Gehard Bersu 1889~1964)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검증을 통과한 확실한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과거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혹은 사회학적 해석을 가급적 지양하였다. 대신 오랫동안 독일 고고학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왔던 유물의 형식학적 연구에 치중하면서 유물과 유적의 편년과 분포, 유물의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또한 비교고고학적 관점에서 유럽과 중근동, 그리고 심지어 유라시아를 포함하는 광범한 지역의 유적·유물을 비교·검토하는 작업 또한 광범하게 수행하였다(Wolfram 2000: 181~192).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대규모 개발 및 건설 작업의 진행과 함께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LBK 주거지에 대한 대규모 발굴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 삶의 복원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거지 고고학이 시도되었으며, 역시 대규모 무덤 유적 발굴을 통해 당시의 인구 규모 및 변화를 추정하려는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유럽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는 호이네부르크(Heuneburg)나 만칭(Manching), 그리고 잔텐(Xanten)과 같은 켈트와 로마의 대규모 거주 유적이 발굴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

이 각지의 발굴 및 수집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목록화 작업,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회의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성격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면서 나름의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고학 자료와 정보를 해당 사회의 특징과 성격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과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기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Wolfgang David의 개인 교시에 따름).

한편 구 서독에서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의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크게 연구기관인 독일고고학연구소, 교육기관이면서 일부 학술 발굴을 담당하는 각 대학의 고고학과, 유물의 수집과 전시, 그리고 일부 문화유산의 보존을 담당하는 주립 혹은 시립 박물관,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일부 해외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에도 참여하는 각 주의 문화재청(Landesamt Denkmalpflege), 그리고 각 주의 문화재청의 용역과 허가를 받아 긴급 구제 발굴을 담당하는 일종의 발굴 법인 등이 있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통해 독립된 정치적 단위로 존재했던 독일의 각 주들이 자체적으로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을 담당하는 박물관과 문화재청 등을 세우거나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이 기본적으로 주 정부의 권한과 의무인 탓에 독일 전체를 관할하며 통일된 체계를 가진 기관 대신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체계를 가진 대학과 박물관, 그리고 문화재청 등을 갖게 되었다.

우선 독일 고고학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는 독일고고학연구소를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독일 외무성 산하 기관으로서 1829년 독일 고고학자들에 의해 로마에 세워졌던 고고학연구소를 모태로 하여 1832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었다(이하의 내용은 Wolfgang David와 Andreas Schachner의 개인 교시와 독일고고학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dainst.org/dai/meldungen>를 참조). 이 기관에는 베를린에 행정과 과학적 분석을 담당하는 본부와 독일을 포함한 중부 유럽의

선사 및 원사 문화 연구(로마 및 게르만시대의 유적·유물을 중심으로)를 담당하는 로마-게르만 연구소(Römisch-Germanische Kommission, 1902년에 설립되었으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위치해 있음) 외에 남유럽과 중근동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까지 자료조사와 발굴조사, 그리고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분소가 있었다. 여기에서 구대륙의 많은 지역에 대한 고고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고고학연구소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를린의 본부와 역시 베를린에 소재한 유라시아연구소(Eurasia Department)와 동양연구소(Orient Department)가 있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로마-게르만 연구소, 뮌헨에 고대사 및 금석학 연구소(Commission for Ancient History and Epigraphy), 본부에 위치한 비유럽권 고고학 문명 연구소(Commission for Archeological Civilisation outside Europe)가 있다. 이외에도 암만(요르단), 바그다드(이라크), 다마스쿠스(시리아), 예루살렘(이스라엘), 베이징(중국), 사나(예멘), 테헤란(이란), 울란바토르(몽골)에 분소가 설치되어 있다.

박물관의 경우 각 주마다, 그리고 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박물관이나 유적 전시관을 운영하며 일정한 체계에 따라 혹은 독자적으로 유물의 수집과 유적의 보존, 그리고 기타 문화유산의 보존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베를린과 바이에른 주의 경우가 이와 관련한 역사가 매우 깊은 이유로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이 과거 프로이센 제국의 수도였던 탓에 프로이센 제국의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었다. 또한 전쟁 중 폭격을 피해 베를린을 포함한 인근 지역, 그리고 독일의 각 주와 심지어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에 프로이센 제국과 관련한 유적·유물들이 보관 혹은 소개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 프로이센 제국의 해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프로이센 제국의 유적·유물의 보존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1957년 프로이센 문화유산관리재단(Prussi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을 설립하기로 결정하

였고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Langels 2007). 이 재단에서는 독일 각지와 해외에 흩어져 있던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프로이센 제국의 각종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다. 특히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 관리하고 있던 프로이센 제국의 문화유산(구 소련에서 반환한 각종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지금의 박물관 지구 Museum Ireland와 제국 도서관 등)의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이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페라가몬 박물관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베를린 주립 박물관과 4개의 연구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립 도서관, 주립 문서보관소, 주립 음악연구소 등을 위시하여 수십 곳의 산하 기관을 관리하고 있다(프로이센 문화유산관리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preussischer-kulturbesitz.de> 참조).

바이에른 주의 바이에른 주립 고고학 콜렉션 및 선사 박물관(ARCHÄOLOGISCHE STAATSSAMMLUNG MÜNCHEN, MUSEUM FÜR VOR-UND FRÜHGESCHICHTE)의 경우 1885년에 세워진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바이에른 주에 위치하는 9개의 박물관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전시, 그리고 기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 문화재청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의 컨설팅과 심의, 각종 고고학 구제 발굴의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해외 지역 유적·유물의 보존과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문화재청의 경우에 중국 진시황 무덤의 진용에 대한 보존 처리 등을 담당한 바 있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에도 1835년 루트비히 1세에 의해 뮌헨에 문화재청이 설립된 이후 주립 박물관을 제외한 1,300개 정도의 소규모 박물관과 16만개 이상의 유적·유물, 그리고 기념물의 관리를 맡고 있다. 뮌헨의 본부 외에 아우구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등을 포함한 바이에른 주의 다섯 지역에 지청을 두고 있다(Stefan Winghart의 개인 교시에 따름).



이외에도 마인즈에 연방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받으며 주로 구석기시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중부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고고학 연구에 집중하는 로만-게르만 중앙박물관(Römisch-Germanisches Zentralmuseum, RGZM)도 있다. 이 기관은 특히 유적 자체의 조사보다는 유물의 복원과 전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알프스에서 발견된 아이스맨 '외찌'의 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산하에 주 전시관 외에 해양박물관(마인즈 소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박물관을 두고 있다.

19세기 이래 독일의 고고학 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베를린제국대학(훔볼트대학)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구 동독에 포함되면서 폰 메하트가 복귀한 마부르크대학을 중심으로 구 서독의 고고학 연구가 활성화된다. 특히 각 주의 주요 대학에 선사 및 원사고고학과 고전고고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과와 자연과학적 분석을 주로 담당하는 각종연구소가 설치되어 고고학 전문 인력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국내 및 해외의 학술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최대 학술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에도 인류학과 민속학 연구에 더하여 고고학 유물·유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고인골 등에 대한 DNA 분석 및 동위원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류학 및 언어학 등의 분야와 협력하여 초기 인류 진화와 확산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학제 간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4; Gringmuth-Dallmer 1991: 19~20; Hänsel 1991: 9~17; Sommer 2000: 205~235).

구 동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치나의 유산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식을 택하였는데, 마르크스 및 엥겔스 이론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 등장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적 유물론과 함께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과 고고학 연구를 강조하였다(Behrens 1984, 1990, 1994; Beran 1990; Kemd'l 1991; Kossack 1999). 특히 고고학 연구,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당의 역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 강제의 정도는 다른 공산권 국가에 비해 그리 강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굳이 사적 유물

론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학과 박물관의 고위직에 머무를 수 있었으며 커다란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에 가입하여 당원이 되기를 권유받았지만 당원이 아니라도 연구 활동 자체에 크게 방해받지는 않았다. 대학 등에서 반드시 공산당원이 아니어도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원로 고고학자들 가운데 몇몇은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고고학 연구에 당의 입장이 강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Coblenz 2000: 307~313).

종전 이후 구 동독에서는 1946년 소련 군정청의 명령에 의해 독일 사회과학원(Deut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이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회과학원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으로 개칭)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원래 1700년 라이프니츠의 조언을 받아들여 브란덴부르크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이자 프로이센 왕국 초대 국왕 프리드리히 1세가 설립한 프로이센 왕립 과학 아카데미(Königlich-Preuß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다. 1949년 사회과학원 산하 선사 및 원사시대 역사위원회(Kommission für Vor- und Frühgeschichte)가 최초로 설치된 후 여러 차례의 통폐합을 거쳐 1990년 통일될 당시에는 고대사 및 고고학 중앙연구소(Zentralinstitut für Alte Geschichte und Archäologie)라는 명칭으로 다른 80개 이상의 연구소와 함께 활동하였다(Deiters 2014: 16~32).

베를린대학을 포함한 여섯 대학(할레대학, 라이프치히대학, 그라이프스발트대학, 로스톡대학, 예나대학)이 주도하여 고고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인력과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통신 및 단기 교육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관련 학위를 수여하고 이러한 학위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고고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5; Coblenz 2000: 317~322).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생 및 교수 비율이 5:1 정도로 매우 낮으며 일정한 학위를 갖추면 그 학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5; Ammer 1969). 독일 통일 이후 이러한 ‘이상적’ 환경이 급격히 열악하게 변화하면서 구 동독 출신 연구자들이 통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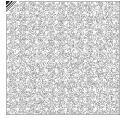
한편 구 동독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각각의 영토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책임지던 오랜 전통을 가진 주가 1952년에 해체되기 전까지 종래의 주 문화재청에서 담당하였다. 1952년 이후 13개의 광역구역이 새로운 행정단위로 등장하면서 중앙정부-광역구역-군(county)의 순서로 수직적 체계에 따른 관리 체계로 변하게 되었다. 한편 중앙정부의 문화부(Ministerium für Kultur) 산하에 베를린 문화재연구소(Institut für Denkmalpflege in Berlin)를 만들고 각각 동베를린, 할레, 에어푸르트, 드레스덴, 슈베린에 분소를 두었으나 (동)베를린 문화재연구소는 해체되고 나머지 네 개의 분소는 각각 문화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문화부는 전국 단위의 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인류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노동계층과 사회주의의 특징과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 그리고 구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참전과 관련 있는 참전 용사의 묘지 등을 목록에 기재하였다. 광역구역이나 군 단위에서도 문화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국 단위는 물론 광역구역, 그리고 군 단위의 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였다(Staroste and Haspel 2014).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광역구역 혹은 군 단위(사실상 원래의 전통적인 주 단위)의 입장이 충돌하였다. 종전 후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건물(전통적인 장원이나 교회를 포함)이나 경관을 해체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새로운 대규모 건물이나 도시를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전쟁의 여파로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폭격에 의해 전파 혹은 반파되거나 제때 보수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그 역사적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수리 및 복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그리고 사회주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각 지역의 자원 봉사자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시도가 각 도시와 마을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정체성을 파괴하고 단조로운 회색톤의 기괴한 도시로 전락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각 지역의 박물관 또한 구 동독 내 각 지역의 선사 및 원사시대의 교육과 관련한 유물의 전시에 주력하였다. 이는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인류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맑시즘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Murray and Evans 2000; Härke 20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동독의 고고학 연구 및 문화보존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인류사의 합법적 발전 과정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궁극적 승리,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승국이었던 구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이 중앙집중식 권력 및 행정 체계와 이를 통제하는 당에 의해 대학과 박물관, 그리고 문화재청을 통해 수직적으로 강력히 관철되고 있었다. 실제로 고고학 및 고대사 연구에서 계급의 발생과 계급사회의 등장, 그리고 중세 농노 사회의 등장 등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생산의 사회적 관계, 즉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는 특히 고고학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만큼 다수의 연구가 생산력의 증대, 즉 생산 도구의 발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과 중앙정부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의 연구에서 지금까지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 말 승문토기(Corded Ware) 연구나 단경호 토기(Globular Amphora) 문화 연구, 그리고 거석 무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 이유로 당과 특정 이데올로기에 연연하지 않고 고고학의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했던 구 동독의



초기 세대 고고학자들, 즉 서독과 동독의 분리 이전에 고고학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과 구 동독에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후속 세대들이 자료에 대한 세밀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중시하던 독일 고고학의 전통적인 연구 방식을 고집했거나 이러한 연구(연구자들)를 기꺼이 보호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5; Coblenz 2000: 308~309; Kossack 1992: 96~100).

V. 독일 통일과 통합 독일 고고학의 등장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 고고학계에서도 기존의 구 서독과 구 동독의 연구기관과 연구조직을 통합하고 연구 방법과 주제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7; Gringmuth-Dallmer 1993a: 275~280, 1993b: 135~142; Jacobs 1996: 45~54, 2000: 339~348). 이상적으로는 양 독일의 연구기관들과 연구조직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균형과 조화 속에서 통일의 정신을 살려 동등하게 통합되어야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진행된 모습은 전혀 달랐다. 주로 서독 출신 연구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대학과 사회과학원, 문화재청, 그리고 박물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뿐만 아니라 개별 성과와 행적을 세밀히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구 동독 비밀경찰에 협력했는지, 만약 협력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당에 가입했는지, 즉 당원인지의 여부 등이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6; Jacobs 2000: 339~34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 고고학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들이 통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구 동독 출신 연구자들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대신 구 서독 출신 연구자들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다. 이러한 구 동독 고고학에 대한 구 서독 중심의 재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Reinecke 1990).

1. 과거 청산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1961년 이후에 구 서독과 구 동독 출신 고고학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1960년대 초반까지 동·서독의 대표적인 고고학자들은 이미 동일한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받았던 동료이자 선후배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분단 이후에도 그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교류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남부 독일의 초기 할슈타트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 가운데 하나였던 호이넨부르크 유적 조사에 구 동독 학자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구 서독 출신 연구자가 구 동독으로 진출하여 구 동독 고고학계의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구 동독 출신 학자들이 구 서독으로 탈출하여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독일의 분단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독일 고고학의 전통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연구의 측면에서 양자의 통합에 요구되는 필요 조건은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6; Coblenz 2000: 333~335).

오히려 통일 독일의 등장 이후 고고학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 동독에서 1960년대 이후 교육을 받았으며 당의 맑스주의적 공식 역사관과 이를 역사 해석의 유일한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교조주의적 연구 경향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들의 처리 문제였다. 기존의 연구 경향과 연구조직을 청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와 동시에 1990년대 이후 독일 고고학에는 나치 독일 시기에 성행하였던 독일의 민족주의적 혹은 인종주의적 연구 경향의 재등장을 배제하면서 맑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를 극복하고 여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구 경향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 서독과 구 동독이 공통적으로 계승하고 있던 독일 고고학의 오랜 전통과 함께 당의 교조주의적 입장이 본격적으로 관철되기 이전인 1960년대 이전의 구 동독의 고고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기

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일 고고학은 전통적인 독일 고고학의 연구 방법론이면서 구 서독 지역에서 유지되어 온 유물 중심의 연구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와중에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등장하였던 신고고학의 연구 절차 및 방법론,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맑시즘의 사적 유물론에서 강조되었던 여러 주장들 가운데 기존의 연구에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 일부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7; Härke 2000: 16~17). 다만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후기과정고고학의 경우 독일 고고학 내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후기과정고고학이 상당 부분 현상학이나 해석학과 같은 독일의 철학적 전통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의 형식학적 분류와 목록화, 그리고 이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자연과학적 분석에 역점을 두었던 독일의 기존 고고학 연구 전통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후기과정고고학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정체성, 권력, 민족 집단과 관련한 여러 주제들이 자칫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과거로부터의 경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물론 최근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경관이나 해석, 자료의 물질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연구기관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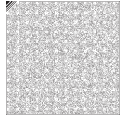
구 동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소련의 영향 하에 있던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구는 사회과학원 산하 고대사 및 고고학 중앙연구소(베를린 소재)가 주도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문화부 산하의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교육은 몇 개의 주요 대학(베를린, 예나, 로스톡, 라이프치히, 그라이프스발트, 할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시 포츠담과 드레스덴을 포함한 소수의 주요 박물관(크게 5개의 주요 박물관)에서 유물의 전시와 보존이 이루어졌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7~78; Coblenz 2000: 315~320).

그러나 통일 이후 구 서독의 체계에 따라 구 동독의 기관들은 구 서독의 기관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통일 조약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 동독에 의해 관리되던 프로이센 제국의 문화유산은 앞서 언급한 프로이센 문화유산관리재단으로 그 관할권이 이양되었다(Unification Treaty, Aug. 31, 1990, Article 38(1),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구 동독의 사회과학원 소속 연구소들은 단순한 하나의 학회로, 그것도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일시적인 단체로 전락했다가 이후 해당 기관의 전환 및 폐지 여부는 그 기관이 속한 각 주의 행정 처분에 맡겨지게 되었다(Unification Treaty, Aug. 31, 1990, Article 35(2),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따라서 사회과학원 산하 고대사 및 고고학 중앙연구소는 구 서독의 고고학연구소에 흡수 통합되어 새로운 독일고고학연구소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집중과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에 여러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고고학의 고등교육도 소수의 대학으로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로스톡대학의 고고학과는 폐지되었다. 박물관의 경우에는 일부 중점 박물관에 한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드레스덴 박물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의 주요 고고학 박물관의 하나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8).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고고학 연구, 전시와 보존, 그리고 정책 수행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련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연구 및 교육, 그리고 보존과 전시 시스템을 어떻게 남한의 체계 속으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고고학 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인력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에서 훈련받은 고고학자의 재취업률이 구 서독 출신에 비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원인에 의해 야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당의 공식적인 입장만을 연구에 반영하도록 훈련받은 구 동독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교육 시스템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구 동독의 많은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매우 이상적인 고고학 교수와 학생의 비율(1:4 또는 1:5)을 갖게 되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따른 교육과 연구, 그리고 자신의 능력 및 자격의 수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면 그 분야에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정책 때문에 한 기관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진 수십 명의 연구원과 관리인, 그리고 안내원이 고용되었던 현실 속에서 이들을 통일 이후 동일 직군에 재취업시키는 쉽지 않았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8).

둘째, 구 서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나 관리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구 동독의 경우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균형 있게 인력을 배치하는 대신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전원 고용이라는 정책 탓에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연구 및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극과 노력이 구 서독에 비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 서독의 동일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가진 연구자나 관리자의 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독일의 통일이 구 동독의 주들이 구 서독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고고학 분야에서도 필연적으로 구 서독이 주도권을 쥔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인력 구조의 재편이 구 서독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8; Jacobs 2000: 344~345). 베를린 훔볼트대학

을 비롯하여 라이프치히대학, 예나대학 등 구 동독의 주요 대학 고고학과 교수직은 독일 통일 이전 혹은 직후 뮌헨이나 튀빙겐, 괴팅겐, 하이델베르크, 쾰른 등 구 서독 지역의 대학에서 수학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로 채워졌다. 대학과 박물관을 포함하여 고고학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구 서독 출신과 구 동독 출신 연구자들의 비율이 4:1 또는 5:1에 이르며 구 동독 지역 내 주요 대학과 박물관의 주요 자리는 구 서독 출신들이 차지하는 대신 구 동독 출신들은 대부분 구 동독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포기하였다. 대신 일부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서독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계약직 혹은 하위 직급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구 동독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들도 이와 같은 현실에 예외는 아니었는데, 구 동독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베르너 코블렌츠(Werner Coblentz 1917~1995)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블렌츠는 앞서 언급한 마부르크대학에서 폰 메하트 교수의 지도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구 동독 드레스덴 박물관과 라이프치히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구 동독 고고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이미 구 서독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구 동독을 대표하는 고고학자로 존경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고고학의 형성 과정에서 그를 비롯한 구 동독 출신의 고고학자들은 주도적인 역할과 목소리를 내는 대신 심사와 자격심사, 그리고 재배치의 대상이 되었다. 구 동독 출신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와는 별개로 통일 이후의 독일 고고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커다란 현실적 한계가 놓여 있었다(Jacobs 2000: 343~345). 한편 통합 독일 고고학의 형성 과정에서 다수의 구 서독 출신 학자들이 구 동독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구 동독 지역의 고고학이 갖고 있던 연구의 잠재력과 더불어 단시일 내에 구 동독 지역의 고고학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8~79).

이러한 사실은 남북한의 통일 이후 고고학 연구자의 재배치와 연구 역량 강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한 출신 고고학자들의 시각 차이와 연구 역량 차이(만약 있다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체 사상의 등장 이후 성장한 북한 고고학자 혹은 고고학 연구 지망자들이 과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고고학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약 받지 못했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최신의 고고학 연구 방법과 시각을 전달할지의 문제는 한국 고고학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이론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구 서독 고고학자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1세대 구 동독 고고학자들과 나뉘대로 구 서독 고고학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생산할 수 있었던 2세대 연구자들이 존재했던 구 동독의 경우와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연구 주제

구 동독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고고학자인 동시에 비록 공산당 당원인 연구자들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고고학 연구와 서술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조주의적 해석의 이면에는 독일에서 19세기 이래 고고학이 시작된 이후 피르호, 폰 메하트, 그리고 라이네케 등으로 이어지는 자연과학적 태도와 이에 기반한 유적·유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기술이 구 동독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구 동독의 연구자들은 당의 교조적인 공식적 입장인 맑스주의에 입각한 사적 유물론과 목적론적 혹은 역사결정론적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대신 유적·유물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기술을 중시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을 암묵적으로 고수하거나 옹호하였다(김범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79). 설사 맑시즘의 입장에 서서 선사 및 원사시대를 해석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조화된 일종의 스탈린식 맑시즘이 아닌 독일의 사회주의적 전통 내에서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온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유연한 입장, 즉 일종의 수정주의적 맑시즘이거나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일종의

부르조아적 해석이었다(Coblenz 2000: 307~310).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경향은 독일 통일 이후에도 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구 동독의 고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연구 역량이 독일 통일 이후 독일 고고학의 통합이 비교적 매우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 소재 대학의 고고학과에 구 서독 출신 연구자들이 진출하면서 연구 경향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고전 고고학과 더불어 북아프리카(이집트를 포함)와 중근동(메소포타미아와 앗시리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 고고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라이프치히와 예나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고유전학 혹은 인류학과 언어학을 포함한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띤 고고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구 동독 시절에도 이 분야의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고 구 서독의 여러 대학에서도 해당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에 구 동독 소재 대학과 연구소에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특히 고유전학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 동독 시절에 쌓아왔던 연구 역량을 보존하는 대신 기존의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해석에서 탈피하고 구 서독 고고학의 연구 시각과 방법을 신속히 이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특히 후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일의 사례는 통합 한국 고고학을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5. 통합 독일 고고학의 형성과 한국 고고학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념적 갈등에 기인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공유한 독일과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차이점



을 갖고 있다. 고고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이념에 따른 구 동·서독의 학문적 경향의 차이가 남북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그 차이의 정도에서는 한국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분단 초기에는 한국과 독일 양국에서 나름대로 남북간, 그리고 동서간 직간접적 학문적 교류와 함께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적어도 일제강점기와 분단 초기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전문적인 고고학 훈련을 받은 도유호와 한홍수 같은 연구자들이 월북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고, 또 그러한 성과를 포함하여 이후 남북한 학자들의 성과가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소개되어 나름의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더하여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통합 독일 고고학의 탄생은 독일 통일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 서독 고고학이 구 동독 고고학을 일방적으로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한국 고고학의 현실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 이에 따른 고고학계의 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가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통합 한국 고고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나친 교조주의적 사회주의나 주체사상 이후에 등장한 화석화된 연구 경향은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1970년대 이전에 북한 학계에서 보여주었던 나름의 긍정적인 연구 성과는 단순한 고고학적 자료와 사실을 넘어서서 문제 의식까지를 포함하여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 이후 주체사상이 등장한 이후 고고학 해석이 지극히 교조화되고 더 이상 해석상 변화의 가능성이 차단된 단

계로 넘어간 이후의 연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북한에서 간행된 각종 발굴 보고서와 구석기시대 이래 각 시대에 대한 개설서, 그리고 고조선과 삼국시대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시각과 가설들은 비록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였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참신하였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충분히 흥미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단계에서 북한 고고학의 초기 성과를 비판적 검토와 함께 공통의 연구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되어온 한국 고고학의 연구 방법과 시각을 통해 이러한 연구 성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간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 발굴조사 추진과 발굴 보고서 작성, 공동 전시 등 실질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와 아울러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양자가 서로 동의 혹은 합의하거나 최소한 용인할 수 있는 공통점을 연구사와 실제 연구 성과에서 확인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독일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20세기 초반까지 독일 고고학에서는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초기 독일 고고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여 연구를 시작한 이유로 소위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가설'에 의지하지 않고 일체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채 유물·유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섬세한 관찰을 중시하는 연구 경향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 혹은 자민족 우월주의의 입장에서 물질문화의 연구를 통해 과거의 민족 혹은 종족의 자취를 찾아 그들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려는 시도가 공존하고 있었다. 물론 이 양자가 서로 완전한 대척점에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자의 입장

이 나치즘에 의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 후자의 입장은 독일 고고학에서 일종의 금기로서 극복하거나 청산해야 될 대상이 되었다.

나치의 패망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동서로 분열된 이후 동독과 서독의 고고학은 이러한 독일 고고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난제를 떠안게 되었다. 구 서독의 경우 전통적인 독일 고고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유물·유적의 관찰과 목록화, 그리고 편년과 분포의 확인에 집중하였다. 구 서독의 연구는 소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고학 자료의 시공간적 분포를 확인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물질을 통해 과거 사회의 모습을 추정하는 해석의 단계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우리가 나름의 생각을 미리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이상, 과거의 물질 자료가 스스로 입을 열어 과거 사회의 모습을 직접 증언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 고고학의 많은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과거 사회의 여러 모습을 추론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그 시도가 단순히 현대인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전제들을 논리적 검토 없이 자료에 직접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구 동독의 고고학에서는 맑스주의의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을 물질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는 시도와 함께 과거의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사회주의의 이념에 충실하거나 혹은 그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 동독의 고고학은 물질 자료가 갖고 있는 자료적 가치를 사회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론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교조화되어 사적 유물론에 어긋난 여타의 해석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서독과 구 동독의 고고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이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비교적 단시일 내에 통합

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분열 이전의 독일 고고학의 전통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분열 이후에도 고고학자들의 교류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구 동독의 고고학이 구 서독의 고고학, 그리고 유럽 고고학 전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름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 선불리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다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이지만 적어도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측면에서는 공통의 연구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공동 조사와 학술 교류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비록 맑시즘과 주체사상에 의거한 형식화된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을 통해 남북한 고고학 및 문화유산 보존의 간극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나름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사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장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2015년도)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이며,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18년 8월 23일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학술회의를 조직하고 발표를 허락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を 표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Overseas Training Expenses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A part of this article was presented in the conference, which was organized by special committee for archaeology of unification,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on 23rd of Aug. 2018. I thank all those who organized this conference and allowed me to present a part of this article.



참고문헌

- 김법철·김종일·이기성·오영찬, 2014, 『통일 시대의 고고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4-24
- 김종일, 2017,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
- 김종일, 2018, 「유럽 선사 및 고대 시기의 민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2
- 김현식, 2006,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논의」 『서강법학』 8,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광현, 1992, 「독일 통일 관련 조약과 독일 헌법의 발전」 『한림법학Forum』 1,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족통일연구원, 1999, 『법적 관점에서 독일 통합』, 민족통일연구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역, 2016,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전문」 『국가별 법령집』

- Ammer, T., 1969, 'Universität zwischen Demokratie und Diktatur', *Ein Beitrag zur nachkriegsgeschichte der Universität Rostock*, Cologne: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 Arnold, B., 1990,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64 (vol. 244)
- Arnold, B. and H. Hassmann, 1995, 「Archaeology in Nazi Germany: The legacy of the Faustian bargain」, In Kohl, P.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hrens, H., 1984, 'Die Ur-und Frühgeschichtswissenschaft in der DDR von 1945~1950', *Miterlebte und mitverantwortete Forschungsgeschichte, Arbeiten zur Urgeschichte des Menschen* 9, Frankfurt, Bern, New York and Nancy: Peter Lang
- Behrens, H., 1990, 'Die Darstellung der Ur-und Frühgeschichte in der archäologischen Geschichtsschreibung der DDR', In Fischer, A. and G. Heydemann (eds.), *Geschichtswissenschaft in der DDR*, vol.2, Berlin: Duncker und Humblot, pp.3~33
- Behrens, H., 1994, 'Welche Leistungen haben die Ur-und Frühgeschichtsforscher der früheren DDR in die gesamtdeutsche Urgeschichtswissenschaft eingebracht?', *Ausgrabungen und Funde* 39, pp.164~168
- Beran, J., 1990, Carl Engel 1895~1947, 'Ein Archäologe aus Magdeburg in den Kämpfen des 20. Jahrhunderts', *Volkstimme Magdeburg* 15 June 1990
- Chang, K. C., 1968, *Settlement Archaeology*, National Press Books
- Childe, V. G., 1954, *What Happened in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 Coblenz, W., 1992, 'In memoriam Wilhelm Unverzagt, 21. 5. 1892 ~17. 3. 1971', *Praehistorische Zeitschrift* 67, pp.1~14
- Coblenz, W., 2000, 「Archaeology under Communist control: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45~1990」, In Härke, H.,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pp.304~338,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Daniel, G., 1977, *150 years of Archaeology* (2nd ed.), London: Duckworkth
- Deiters, L., 2014, 'Das Institut für Denkmalpflege in der DDR - Erinnerungen und Reflexionen', In Staroste, H. and J. Haspel, *Denkmalpflege in der DDR, Rückblicke, Landesdenkmalamt Berlin*, pp.16~46, Berlin: Nicolai Verlag
- Eichhoff, M., 2005, 「German archaeology and national Socialism, Some historiographical remark」, *Archaeological Dialogues* 12(1), pp.73~90
- Gebühr, M., 1987, 'Montelius und Kossinna im Himmel', *Archäologische Informationen* 10, pp.109~115
- Gramsch, A. and U. Sommer, 2011, *A History of Central European Archaeology*, Budapest: Archaeolingua foundation
- Gräslund, B., 1987, *The Birth of Prehistoric Chr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ngmuth-Dallmer, E., 1991, 'Berlin und die prähistorische Archäologie. Bemerkungen aus der Sicht eines Beteiligten, Mitteilungen der Berliner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 12, pp.19~20

참고문헌

- Gringmuth-Dallmer, E., 1993a, 'Die Ur- und Frühgeschichtsforschung an der Berlin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nach Wilhelm Unverzagt Versuch einer Bilanz', *Ausgrabungen und Funde* 38(6), pp.275~280
- Gringmuth-Dallmer, E., 1993b, 'Archaeology in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since 1989', *Antiquity* 67, pp.135~142
- Grünert, H., 1992, 'Ur- und Frühgeschichtsforschung in Berlin', In Hansen, R. and W. Ribbe (eds.), *Geschichtswissenschaft in Berlin im 19 und 20 Jahrhundert Persönlichkeiten und Institutionen*,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pp.91~148
- Halle, U., 2005,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Academic scholarship and the rise of the 'lunatic fringe'', *Archaeological dialogues* 12(1), pp.91~102
- Hänsel, B., 1991, Berlin und die prähistorische Archäologie, *Mitteilungen der Berliner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 12, pp.9~17
- Härke, H., 1990, 'Die deutsche Sitzung bei TAG 90: Eine Auseinandersetzung mit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 des Faches in Deutschland', *Archäologische Informationen* 13(2), pp.224~229
- Härke, H., 2000,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Hassmann, H., 2000, 'Archaeology of 'Third Reich'', In Härke, H.,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pp.65~139,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Jacobs, J., 1996, 'Zur Wissenschaftsstrategie der deutschen Archäologie seit 1990',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4, pp.45~54
- Jacobs, J., 2000, 'German unification and East German archaeology', In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pp.339~351,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London: Routledge
- Kemd'l, A. (ed.), 1991, 'Berlin und Umgebung', *Führer zu archäologischen Denkmälern in Deutschland* 23, Stuttgart: Konrad Theiss
- Kossinna, G., 1920, *Die Herkunft der Germanen - Zur Methode der Siedlungsarchäologie*, Leipzig: Verlag von Curt Koblitzsch
- Kossack, G., 1957, 'Zur Chronologie der älteren Hallstattzeit (Ha C) im bayerischen Alpenvorland', *Germania* 35, pp.207~223
- Kossack, G., 1959, *Südbayern während der Hallstattzeit, Römisch-Germanische Forschungen* 24, Berlin: Verlag Walter de Gruyter and Co
- Kossack, G., 1981, 'Gedanken zur Periodisierung der Hallstattzeit', *Die Hallstattkultur, Bericht über das Symposium in Steyr* 1980, pp.35~46
- Kossack, G., 1992, 'Prehistoric Archaeology in Germany: Its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Norwegian Archaeological Review* 25-2, pp.73~109
- Kossack, G., 1995, 'Mitteleuropa zwischen dem 3 und 8 Jahrhundert vor Chr. Geburt. Geschichte, Stand und Probleme der Urnenfelderforschung', In *Beitäge zur Urnenfelderzeit nördlich und südlich der Alpen*, pp.1~64 (Monographien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Mainz 35)
- Kossack, G., 1999, *Prähistorische Archäologie in Deutschland im Wandel der geistigen und politischen Situation*, München: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Langels, O., 2007, 'Constitutional Reality: 50 years of the Prussi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Deutschlandradio*, 25 July 2007
- Montelius, O., 1903, *Die typologische Methode, Die ältere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Stockholm



참고문헌

- Montelius, O., 1986, *Dating in the Bronze 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Scandinavia, With an introduction by Bo Gräslund*, Stockholm
- Murray, T. and C. Evans, 2008, *Histories of Archa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inecke, A., 1990, 'The chances and risks for East German Archaeology',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9(1), pp.163~166
- Reinecke, P., 1911/1965, *Mainzer Aufsätze zur Chronologie der Bronze- und Eisenzeit*, Bonn: Habelt
- Reinecke, P., 1924, 'Zur Chronologischen Gliederung der Süddeutschen Bronzezeit', *Germania* 8, pp.43~4
- Smolla, G., 1979/80, 'Das Kossinna-Syndrom', *Fundberichte aus Hessen* 19/20, pp.1~9
- Smolla, G., 1981, 'Umweltprobleme der "Pfahlbauforschung"', *Archäologische Informationen* 15, pp.24~32
- Sommer, U., 2000, 'The teaching of archaeology in West Germany', In Härke, H. 2000,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pp.202~239,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Staroste, H. and J. Haspel, 2014, *Denkmalpflege in der DDR, Rückblicke, Landesdenkmalamt Berlin*, Berlin: Nicolai Verlag
- Thomsen, C. J., 1848, *A Guide to Northern Archaeology*, Copenhagen: brothers
- Torbrügge, W., 1979, *Die Hallstattzeit in der Oberpfalz I, Auswertung und Gesamtkatalog*, Materialh, Bayer, *Vorgesch* 39
- Torbrügge, W., 1992, 'Die Frühe Hallstattzeit (HaC) in chronologischen Ansichten und notwendige Randbemerkungen Teil I. Bayern und der 'westliche Hallstattkreis'',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 39, pp.425~614
- Trachsel, M., 2004, *Untersuchungen zur relativen und absoluten Chronologie der Hallstattzeit, Universitätsforschungen zur Prähistorischen Archäologie*, Bonn: Habelt
- Trigger, B., 1989, *The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it, W., 2000, 'Gustav Kossinna and his concept of a national archaeology', In Härke, H.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pp.40~64,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Unverzagt, W., 1962, '15 Jahre Vor- und Frühgeschichtsforschung bei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Ausgrabungen und Funde* 7, pp.255~259
- Wetzel, G., 1992, 'Bodendenkmalpflege in Ostdeutschland - quo vadis?', *Archäologische Informationen* 15, pp.24~32
- Wiwjorra, I., 1996, 'German archae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nationalism and racism', In Diaz-Andreu, M. and T. Champion, 1996,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London: UCL Press
- Wolfram, S., 2000, 'Vorsprung durch Technik or Kossinna syndrome? Archaeological theory and social context in post-war West Germany', In Härke, H.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pp.180~195,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Wolfram, S. and Jacobs, J., 1993, "'Die deutsche Archäologie nach der Vereinigung" Eine Podiumsdiskussion veranstaltet von der Thierie-AG am 20 und 21. 9. 1993 in Siegen', *Archäologische Informationen* 16, pp.285~286
- Constitution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ct. 7, 1949,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 Constitution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pr. 6, 1968,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 Deutscher Bundestag 1949 [2017],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 Unification Treaty, Aug. 31, 1990,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and Its Conservation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Germany

- Focusing o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nd Site Conservation -

Jongil Kim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kim218@snu.ac.kr

Abstract

Up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Germany, there were two research trends: 1) emphasizing objectives and making detailed observations of archaeological artifacts and sites, 2) tracing the remains of specific nations or ethnic groups and defining their temporal-spatial boundaries by conducting research on material culture in terms of nationalism or ethnocentrism. After the Second World War ended and Germany was divided, West German archaeology focused on observations of artifacts and sites, cataloging them, and doing research on chronology and distribution following their own traditional methodologies. East German archaeology attempted to prove the developing process of history and its Marxist principles based upon material culture and to examine the historic value of inherent specific cultural heritage based on criteria regarding how it corresponded to socialism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ocialism.

Nevertheless, East and West German archaeology shared traditional archaeological methods inherited from German archaeology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and contact between archaeologists in West and East Germany continued to a degree. Furthermore, East German archaeology produced significant archaeological achievements acknowledged by West German and European archaeologists. These facts provided the momentum to complete rapid incorporation of the archaeologies of West and East Germany in spite of a one-sided process imposed by West German archaeology.

In the case of Korea, it seem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share common research history and traditions and to encourage mutual academic exchange (e.g. joint excavation and archaeological research). Furthermore, it is also imperative to have open-minded attitudes toward accepting substantial results and interpretations achieved by North Korean archaeologists under scrutiny when and where necessary, despite seeming to have been fossilized by Marxism and Juche ideology. Any efforts to narrow the gap in archaeological research and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between the archaeolog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made immediately. The case of Germany demonstrates how such a project could proceed efficaciously.

Keywords unification of Germany, German archaeolog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ultural exchange

Received 2018. 12. 31 • Revised 2019. 01. 16 • Accepted 2019. 02. 01

